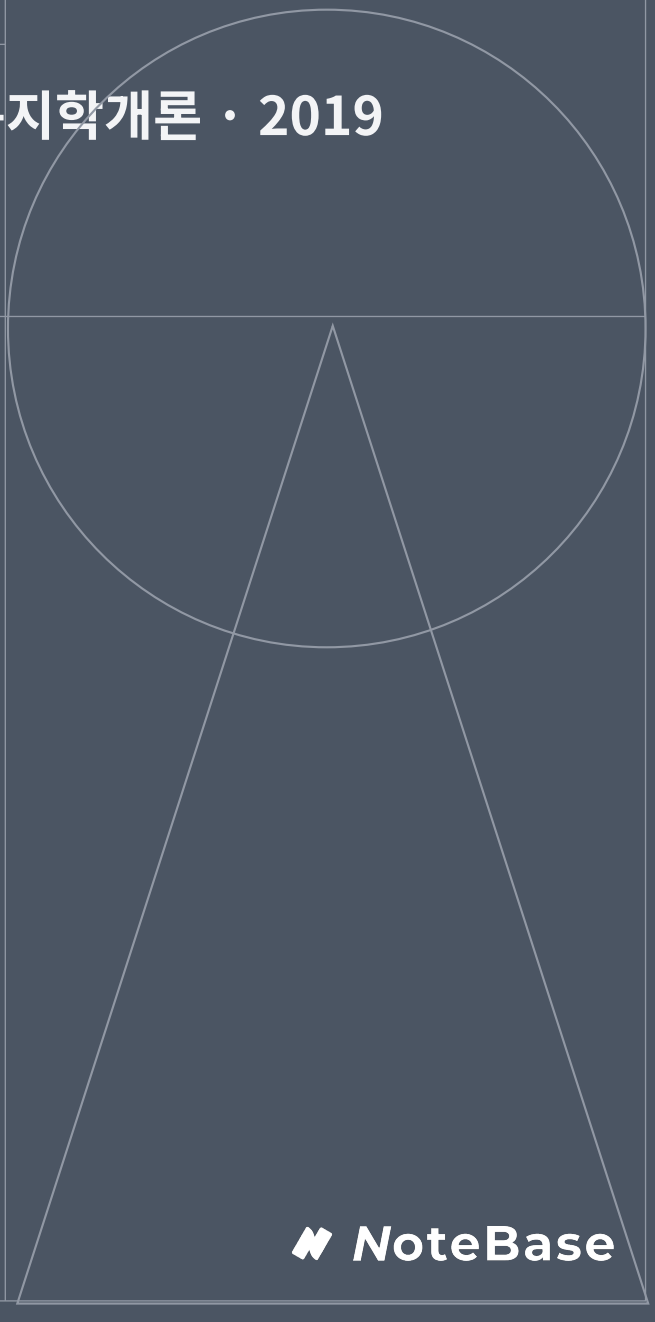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9

문 1. 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

② 사회복지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③ 대상자의 역의 선택

④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유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재화이다. 이러한 **사유재적 성격 자체는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국가 개입은 외부효과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시장이 급여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의 행동이 대가의 지급이나 보상 없이 제삼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사회복지급여가 수급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편익을 주면, 시장에서는 그 **사회 전체의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급여가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국가는 재정 지원이나 직접 제공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X: 사유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경합성을 가진다. 가격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사유재적 성격만으로는 시장실패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국가 개입의 근거로는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을 들 수 있다. 사유재적 성격의 급여라도 형평성 등 다른 이유로 국가가 제공할 수는 있다.

③ O: 역의 선택은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수준을 보험자보다 잘 아는 상황에서, 같은 보험료라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현상이다. 가입자의 평균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면 위험이 낮은 사람은 더 이탈하고, 민간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가는 강제가입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집단을 함께 묶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④ O: 도덕적 해이는 보장받게 된 사람이 손실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되어 **위험 예방 노력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등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제공자가 이러한 행동을 충분히 관찰하기 어려우면 비용이 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어 국가의 제도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개입만으로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급여의 기준은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공통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수급자 선정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정한 급여별 소득 기준을 활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② O: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구가 얻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하여 경제적 능력을 판단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③ X: 급여의 기준과 수급자 선정기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에 모두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④ O: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없거나 그곳에서 급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급자의 희망은 위탁 실시를 허용하는 사유이며,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NoteBase

문 3.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례관리는 통합적 실천방법이자 체계적인 과정이다.

② 사례관리는 공식적, 비공식적, 개인적, 지역사회적 자원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③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연계, 의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입을 활용한다.

④ 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는 사례관리의 일반적 지향과 다르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여러 영역의 서비스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다. 욕구를 사정하고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연계한 뒤, 제공 상황과 결과를 점검·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② O: 복지기관·의료기관 등의 공식적 자원과 가족·이웃 등의 비공식적 자원을 함께 활용한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능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을 줄이도록 **욕구에 맞게 자원을 조정**한다.

③ O: 사례관리자는 상담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연계·의뢰하거나 구매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제공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입을 활용한다.

④ X: 사례관리는 시설에 입소시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일반적 특성으로 삼지 않는다.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필요에 따라 시설 서비스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시설보호 자체가 사례관리의 중심 원리는 아니다.

NoteBase

문 4. 사회복지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Universalism)에서 사회복지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인정된다.

②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집단, 유색인종, 농어촌지역주민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에 대한 입학, 고용, 승진 등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③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말한다.

④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라는 한정이 잘못되었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팔아 얻는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편주의는 사회복지급여를 일부 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 본다. 따라서 빈곤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에게만 급여를 주는 선별주의와 구별된다.

② O: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겪는 누적된 차별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입학·고용·승진 등에서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확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같은 기준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상품화란 생계를 유지하려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탈상품화는 사회적 권리로 보장되는 급여를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생계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탈상품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전에 임금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설명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④ O: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치료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우도록 돕는 실천 접근이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능력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선지의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문제나 결함의 치료보다 강점의 발견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간 전달체계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다.
ㄷ.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진다.
ㄹ.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개별 욕구에 맞춘 융통성은 **지역에 가까운 전달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높아지기 쉽다.

보기별 해설

ㄱ. O: 민간 전달체계는 다양한 기관이 각기 다른 특성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O: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일반적인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적 책임**이 강조된다.

ㄷ. X: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나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 접근성과 융통성은 중앙정부 중심일 때보다 **지방정부나 지역의 민간기관이 전달주체가 될 때** 높아지기 쉽다.

ㄹ. O: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거나 위탁**하여 민간의 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하는 흐름을 포함한다. 민간위탁에서는 민간기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관리·감독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민영화가 곧 공적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도: 매우 높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높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매우 낮음

②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계층화 정도: 계층 간 통합 강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계층 간 차이 유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계층 간 대립 심화

③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국가의 역할: 중심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보조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주변적

④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전형적 국가: 미국,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프랑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미국은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프랑스는 직업·지위별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형적 국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탈상품화는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급여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시장 의존도가 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장하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이고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므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자유주의의 '매우 높음'과 사회민주주의의 '매우 낮음'을 바꾸어야 한다.

② X: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공공부조와 그 밖의 계층이 이용하는 민간복지 사이에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계층 간 분화가 강화**된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별로 급여와 권리를 달리하여 기존 계층 간 차이를 유지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여러 계층을 보편적 복지제도에 포함하여 **계층 간 통합을 강화**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통합 강화'와 사회민주주의의 '대립 심화'가 잘못 연결되었다.

③ X: 국가의 역할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주변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보조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중심적이다. 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복지 충족을 우선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조합주의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중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완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보편적 급여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므로 **국가의 역할이 중심적**이다. 자유주의의 '중심적'과 사회민주주의의 '주변적'을 바꾸어야 한다.

④ O: **미국은 자유주의, 프랑스는 조합주의,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의 전형적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보험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공적 보호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는 직업·지위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호하며, 스웨덴은 보편적 급여와 공공서비스를 통해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한다.

NoteBase

문 7.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ㄹ.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긴급지원은 **선지원·후조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 등에 관한 사후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ㄱ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는 지원과 조사의 순서를 바꾼 표현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확인하여 먼저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사후조사한다. 경제적 요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ㄴ. O: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위기상황의 지속이 연장 사유이고, 위원회의 심의가 그 절차적 요건이다.

ㄷ. O: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같은 필요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는 원칙이다.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긴급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용이 동일한지가 기준이다.

ㄹ. O: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거나 반드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ㄴ·ㄷ·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8.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의 8단계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희망 대 절망

② 자율성 대 수치심

③ 신뢰감 대 불신감

④ 근면성 대 열등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희망 대 절망'은 에릭슨의 발달과업이 아니다. 노년기의 과업은 **자아통합 대 절망**이며, 희망은 영아기의 신뢰감 대 불신감 과업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면서 형성되는 기본 덕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희망은 발달과업의 대립항이 아니라 기본 덕목**이다. 영아기에 신뢰감 대 불신감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서 형성된다. 절망과 대립하는 발달과업은 노년기인 8단계의 자아통합이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전체로 받아들이면 자아통합에 이르고, 삶을 후회하며 수용하지 못하면 절망을 경험한다.

② O: 자율성 대 수치심은 유아기인 2단계의 과업이다. 이 시기에는 배변이나 옷 입기 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시도하면서 **자율성**을 기른다. 과도한 통제나 비난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쉽다. 이 과업은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으로도 표현한다.

③ O: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인 1단계의 과업이다. 양육자가 먹이기·돌보기 등의 욕구에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면 자신과 타인, 세상을 믿는 기초가 형성된다. 돌봄이 불안정하면 불신감이 커질 수 있다.

④ O: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인 4단계의 과업이다. 학교생활에서 학습과 과제를 수행하며 **노력하여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을 기른다. 반복되는 실패나 부정적 비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NoteBase

문 9. 사회복지 이론 및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③ 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을 제시했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체제로 보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롤즈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신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중시하며 국가의 역할을 폭력·절도·사기 방지와 계약의 집행 등으로 제한하는 **최소국가**를 옹호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국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② X: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자유가 충분히 실현된다고 보지 않는다. 빈곤과 불평등이 실질적인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사회복지와 재분배를 통해 자유를 누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간섭의 부재를 중심으로 자유를 설명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 가깝다.

③ O: 롤즈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특정 계층만 누리게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④ X: 마르크스주의가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체제로 비판한 핵심 대상은 **자본주의**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관계에서 착취와 소외의 원인을 찾는다.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입장으로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와(과)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와(과)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② ㉠: 최저보장수준, ㉡: 최저임금

③ ㉠: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④ ㉠: 기준 중위소득, ㉡: 최저보장수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두 기준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빈칸별 해설

㉠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매년 공표하도록 정한 첫 번째 기준은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이 빈칸에 최저생계비나 기준 중위소득을 넣어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기준이다. 같은 항에서 최저보장수준과 함께 공표하도록 정한 두 번째 기준은 **최저임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급여의 보장수준뿐 아니라 근로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 최저보장수준, ㉡에 최저임금을 연결한 조합은 ②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사례의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의 집은 누전 위험,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장시간 일하는 A군의 어머니는 청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례관리자는 관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집안 대청소를 실시해 A군의 가족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A군의 ADHD 치료를 위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①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했다.

② 인적 자원 동원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③ 사례관리자는 자원연계자 역할을 수행했다.

④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례에서 확인되는 활동은 자원봉사자와 보건·정신건강 기관을 연결한 **자원연계**이다.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례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했다. 서로 다른 기관과 인력을 연결하여 가족의 주거환경과 치료 욕구에 대응했으므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한 것이다.

② O: 자원봉사자들이 집안 대청소에 참여하도록 연결한 것은 **인적 자원을 동원**한 활동이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③ O: 자원연계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ADHD 치료를 위해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결했으므로 이 역할을 수행했다.

④ X: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사례에는 가족의 선택과 참여를 확대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개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된 활동은 외부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주거·치료 욕구를 충족한 자원연계이며, 서비스 제공 자체만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비율측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명목, 서열, 등간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ㄴ. 절대영점을 가지고 있다.
ㄷ. 사칙연산(＋, －, ×, ÷)이 불가능하다.
ㄹ. 온도, 지능지수(IQ)가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비율측정은 명목·서열·등간측정의 특성에 **절대영점**이 더해진 측정 수준이다. 측정값 0이 측정 대상의 양이 없음을 뜻하므로, 값 사이의 차이뿐 아니라 **몇 배인지도 비교**할 수 있다.

보기별 해설

ㄱ. O: 비율측정은 대상을 구분하는 명목측정, 크기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열측정, 값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등간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여기에 절대영점이 있어 **값 사이의 비율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ㄴ. O: 비율측정의 **절대영점은 측정 대상의 양이 없음을 나타내는 0**이다. 길이·무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편의상 정한 기준점과 구별된다.

ㄷ. X: 비율측정은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값의 합과 차이뿐 아니라 비율도 의미가 있으므로, 60 kg은 30 kg의 두 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를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로 고쳐야 한다.

ㄹ. X: 일반적으로 측정 수준의 예시로 제시되는 온도는 섭씨·화씨 온도이며, 지능지수(IQ)와 함께 **등간측정**에 해당한다. 값 사이의 간격은 같지만 0이 측정 대상의 양이 없음을 뜻하지 않아 두 배라는 해석은 할 수 없다. 다만 절대영점을 사용하는 켈빈 단위의 절대온도는 비율측정이다. 비율측정의 예로는 길이·무게 등을 들어야 한다.

비율측정의 특성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ㄴ이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②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③ 자원의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 단위는 **시·군·구**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관리 등을 수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를 지원·관리하므로, 설치 단위와 업무 지원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② O: 경제·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욕구가 겹친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민간의 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며,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한다.

③ O: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총괄 관리**한다.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개발하여 통합사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④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내 관련 기관과 **민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나뉜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여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이다.

NoteBase

문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킨슨병
ㄴ. 당뇨병
ㄷ. 뇌경색증
ㄹ. 고혈압
ㅁ. 뇌내출혈
ㅂ. 류마티스 관절염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ㄹ, ㅁ, ㅂ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법령상 노인성 질병인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판단한다. 파킨슨병과 뇌경색증·뇌내출혈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법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을 별표 1에 따른 질병으로 정한다. 따라서 노인에게 흔하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ㄱ. 해당: 파킨슨병(G20)은 **별표 1에 명시된 노인성 질병**이다.

ㄴ. 비해당: 당뇨병 자체는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에게 흔한 만성질환인지와 법령상 노인성 질병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ㄷ. 해당: 뇌경색증(I63)은 별표 1에 포함된 **뇌혈관질환**이다.

ㄹ. 비해당: 고혈압 자체는 별표 1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록에 명시된 뇌경색증·뇌내출혈과 **고혈압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ㅁ. 해당: 뇌내출혈(I61)은 별표 1에 명시된 노인성 질병이다. 뇌경색증과 함께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포함된다.

ㅂ. 비해당: 류마티스 관절염은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보기는 ㄱ·ㄷ·ㅁ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되었다.
ㄴ. 영국 개정구빈법의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 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ㄷ.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받는 스핀햄랜드법은 현대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ㄹ.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으며, 중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뒤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영국의 **제3의 길**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환보다 뒤에 등장한 블레어 정부의 노선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케인즈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된 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모두 시장의 역할과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 제3의 길이 본격화된 것은 1979년 출범한 대처 정부보다 뒤인 1997년 출범한 블레어 정부 시기이다. 따라서 영국이 신자유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3의 길을 강화했다는 설명은 시기와 노선을 혼동한 것이다.

ㄴ. O: 1834년 영국 개정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은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조건을 **최하층 독립 근로자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독립 근로자는 구제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한다. 구제받는 편이 일하는 것보다 유리해지지 않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ㄷ. O: 1795년 시행된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계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정하고, 임금이 그 수준에 미달하면 구빈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제도였다. 빈민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되며, 현대 최저생활보장의 선구적 기반으로 이해된다.

ㄹ. O: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을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무분별한 원조가 의존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조 신청자의 생활 상태와 구제 필요를 조사하고 자선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 구빈을 방지**하려 하였다. 조사 결과에 맞는 원조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옳은 보기는 ㄴ · ㄷ ·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를 이사 수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한다. 대표이사도 이사 수에 포함되므로, 선지의 '대표이사를 제외한'은 '대표이사를 포함한'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직위 모두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길이는 다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다.

③ O: 같은 법 제20조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원은 해당 임원 자리가 비는 것이며, 보충은 법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④ O: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현원은 실제 재직 중인 이사 수를 뜻하며, 외국인 이사 수가 그 절반과 같은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정신건강요양보호사'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고쳐야 한다. '정신건강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까지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② O: 종전의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전부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7년 5월 30일이므로 전부개정된 해와 시행된 해를 구별해야 한다.

③ X: 2016년 전부개정 당시 제17조제2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하였다. 선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요양보호사'로 잘못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요양보호사'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고쳐야 한다.

④ O: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이다.

NoteBase

문 18. 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③ 고용보험법

④ 국민연금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이다. 권리구제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의 명칭이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6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가입자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구별된다.

③ 고용보험법: 제87조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둔다**.

④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가입자 자격·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10조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네 법률의 불복 절차를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법만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아닌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규정한다.

NoteBase

문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도 자활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은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다. 자활급여는 당장의 생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할 능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포함한다.

②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자활사업의 하나로 규정한다. 같은 항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를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때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자활근로 참여를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이행할 기회를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20.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이다.
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ㄹ.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CYS-Net의 핵심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다.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에 맞춰 상담·보호·교육 등의 서비스를 연결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상담,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 직업체험·취업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 복귀와 사회진입을 돕는다.

ㄴ. O: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망**이다.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보호·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ㄷ. O: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어·진로 교육과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다.

ㄹ. O: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므로, 보호와 함께 생활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ㄱ·ㄴ·ㄷ·ㄹ 모두 해당 지원사업이나 기관의 대상과 기능에 부합하므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